

[종합·해설]



12·19 재·보선 현장을 가다

<1> 장성 군수

■ 현장과 시각 ■

지역 발전 비전 제시하며 표심 공략



<김한종 후보> <김홍주 후보> <김양수 후보> <이 청 후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유두석 전 군수가 1년4개월만인 지난 10월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성을 선고받아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단체장이 종도 하차한 지역에서 흔히 나타나는 지역민심의 분열은 이 지역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이를 의식한 듯 후보들은 저마다 통합의 적임자임을 내세우는 한편 지역발전의 새 비전을 제시하며 표심공략에 분주하다.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데다 민주당 지지기반도 만만치 않아 조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정당 소속 후보들의 강세가 점쳐졌으나 선거전이 중반전으로 접어들면서 무소속 후보들의 인지도가 상승, 결과를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층이 40~50%에 달해 예측불허의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인과 기업인, 행정가, 교육자 출신의 4자 구도로, 이 가운데 세 명이 활동면을 연고로 삼고 있고, 본관이 다른 세 김씨의 대결도 흥미롭다.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들의 측면 세대결도 불거리다.

대통합민주신당 김한종 후보와 민주당 김홍주 후보는 전통적 지지기반과 조직을 바탕으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

4자 구도…부동층 많아 예측불허 선거전

김한종 '토박이론' 앞세워 농촌 활성화

김홍주 'CEO형 경제군수론' 펼쳐

김양수 공직 30년 행정전문가 부각

이 청 "유前군수 군정 성공적 마무리"

반면 무소속 김양수 후보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지역 곳곳을 누비며 인지도 상승과 인물론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유 전 군수의 부인인 무소속 이 청 후보는 유 전 군수의 지지자들이 든든한 후원군 역할을 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김한종 후보는 전남도

의원 경력과 '토박이론'을 앞세워 '화합하는 장성'과 '군민 모두가 잘 사는 명품 장성'을 만들겠다며 표심을 두드리고 있다. 김 후보는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장성농축산물유통공사 설립, 상무대 식자재 공급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고, 광주광역시-장성군 통합, 전남대 유

■ 장성군수 후보

정당	이름	나이	현직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남세실적	전과
신당	김한종	53	정당인	조선대 1년 졸업	전남도의원	4억 8천만원	군필	109만원	1건
민주당	김홍주	65	기업인	고려대 교육학석사	정보통신부 중앙회장	9억 1천만원	군필	3천 466만원	없음
무소속	김양수	57	무직	목포대 행정학박사	전남도 행정학전국장	2억 7천만원	군필	745만원	없음
무소속	이 청	50	무직	전북대 과학교육과	광내중 교감	15억 2천만원	비대상	2천 294만원	없음

* 선관위 신고 기준, 후보 4명 모두 세법제액은 없음.

처, 노인 일자리 창출, 연구개발특구 조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았다.

민주당 김홍주 후보는 기업인 출신답게 'CEO형 경제군수론'을 폈고 있다. 한국전자정보시스템 회장을 맡고 있는 그는 "경제적으로 나후된 장성은 경영 경험과 중앙 인맥을 바탕으로 기업과 투자를 유치해낼 수 있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특성화고교 육성과 장성호 수상종합레저타운 건설, 농산물 인터넷 판매 확대 및 브랜드화, 실버산업 육성을 통한 노인복지 향상 등 주요 정책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무소속 김양수 후보는 전남도 감사관과 무안부군수, 행정혁신국장 등 장성군과 전남도에 30여년간 근무하면서 기획력과 아이디어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행정전문가임을 부각시키고 있다. 친환경농산물물류센터 건립, 상무평화 공원 및 축령산 휴양단지, 안정적인 노

인일자리 확보, 전원형 웨딩주거단지 조성 등 4개 분야 20가지 공약도 직접 설계했다. 조직과 돈, 소속 정당을 배제한 '3 무 클린선거'를 선언한 김 후보는 "시민과 돈이 물려드는 활기찬 장성, 통합의 장성을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무소속 이 청 후보는 국가개발촉진지구 사업, 나노산단내 그린벨트 해제, 도거노인 사랑의 집짓기 등 유전 군수가 추진해온 사업들을 책임지고 마무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임을 강조하며 명예회복을 벼르고 있다. 교감으로 퇴직하기 까지 27년간 교육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노인복지, 여성, 장애우 등에 대한 정책도 적극 행기겠다는 각오다. 이 후보는 "중단없는 장성 재창조를 위해 유전 군수가 추진했던 민선 4기 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무안공항, 쫓기듯 개항한 뒤



박치경

정치부 차장

환황해권 거점공항을 표방하며 지난달 8일 개항 후 한 달을 맞은 무안 국제공항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무안공항은 연간 652만 명을 수용하고 8만t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을 갖췄지만 지난 한 달동안 이용객은 고작 7천500여명.

서남권의 대중국·동남 아의 관문으로 육성하겠다는 슬로건이 무색하게 개항 한 달까지 무안공항에 취항중인 항공편은 매일 무안~김포, 무안~상하이 등 겨우 두 편이다.

이 달에 깨끗하고 넓게 꾸며진 공항 대합실은 한산하다 못해 읊씨년스럽기까지 하다.

물론 내년 상반기 광주~무안고속도로가 완전 개통하면 광주공항 국제선이 무안으로 옮길 예정이어서 지금보다는 훨씬 활기를 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항 한 달까지의 추세로 보면 무안국제공항이 조기에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양상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의 앞 뒤 돌아보지 않는 '빨리빨리 행정'이 무안공항 조기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이다.

당초 무안공항은 광주~무안고속도로가 완공되는 시점인 내년 6월 개항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무안공항을 중심으로 한 서남권종합발전계획과 서남해안 관광레저기반도시 조성(J프로젝트) 등에 대비해 무안공항 개항을 서둘렀지만 앞선 의욕만큼 공항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꼼꼼하게 청기지 못했다.

정부의 어설픈 준비 탓에 무안공항은 국제공항의 기본 요건인 C (세관)·I (출입국관리)·Q (검역) 업무를 광주공항 국제선 인력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무안공항은 CIQ 인력 부족으로 광주공항 국제선과 시간이 겹친다는 새로운 국제 항공편을 취항시킬 수 없다는 핸디캡을 안고 있다. 이는 곧 주도면밀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다.

전 직원이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을 오가며 출입국 관리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광주출입국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무안공항 개항에 대비해 지난 4월부터 기회있을 때마다 정부 관련 부처에 인력 증원을 요구했지만 전혀 반영이 안됐다"고 푸념했다. 정부가 무안공항 개항을 앞당기는 데만 급급했지 정작 공항을 정상운영에 필수적인 후속조치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지역발전을 앞당긴다는 명분으로 일찍 문을 연 무안국제공항 운영 실태는 "아직 흡족하지 않다"는 평이다. 무안공항이 국제공항의 기본 요건을 제대로 갖춰 빠른 시간 내에 제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정부의 뜻이다.

/unipark@kwangju.co.kr

한나라 전남도당, 신당에 정책선거 제안

광주에서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정책 선거를 다짐했다.

한나라당 전남도당 관계자들은 8일 오전 광주시 동구 학동 대통합민주신당 전남도당 사무실을 방문해 신당 관계자들에게 정책선거 제안서를 전달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제안에서 "한국 정치의 후진적 모습인 네거티브 선거를 버리고 정책대결을 하자"며 "지역민들을 위한 어떤 정책을 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가를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신당측은 이에 대해 "이명박 후보에 대한 갖가지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한나라의 대통령이 되기되면서 시인할 것은 시인해야 한다"며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용서를 빌고 정책 선거에 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만남은 지난 7일 한나라당 전남도당 박재순 위원장이 대통합민주신당 전남도당 신종식 위원장에게 제안, 신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여 성사됐다.

예산·민생법안 처리 연말 임시국회 오늘 소집

새해 예산안 및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연말 임시국회가 오는 10일부터 30일간의 회기로 열린다.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 등 의원 142명의 요구로 소집된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정기국회 회기 종료 시점(12월9일)까지 처리되지 못한 257조3천억원(통합재정 지출 기준) 규모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예산안 처리 시점과 관련, 한나라당은 대선 이후인 오는 28일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인 반면, 신당과 비교섭단체 정당들은 가급적 대선 전에 예산 처리를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경찰특공대 대선후보 경호 강화
총기탈취 사건으로 인해 대선 후보 경호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지난 8일 천안 아리오 광장에서 열린 모 정당 대선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경찰특공대가 인근 건물에서 김시경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대선 투표소 1,188곳 확정

오는 19일 제17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실시되는 광주·전남지역 투표소는 모두 1천188곳으로 확정됐다.

광주시·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대선 및 재·보선 투표가 실시되는 광주지역 투표소는 329곳, 전남은 859곳으로 확정됐다.

■ 광주·전남 대선 투표소 1,188곳 확정

선관위는 오는 12일 선거인 명부를 확정한 뒤 14일 투표소와 투표방법 등을 담은 투표안내문을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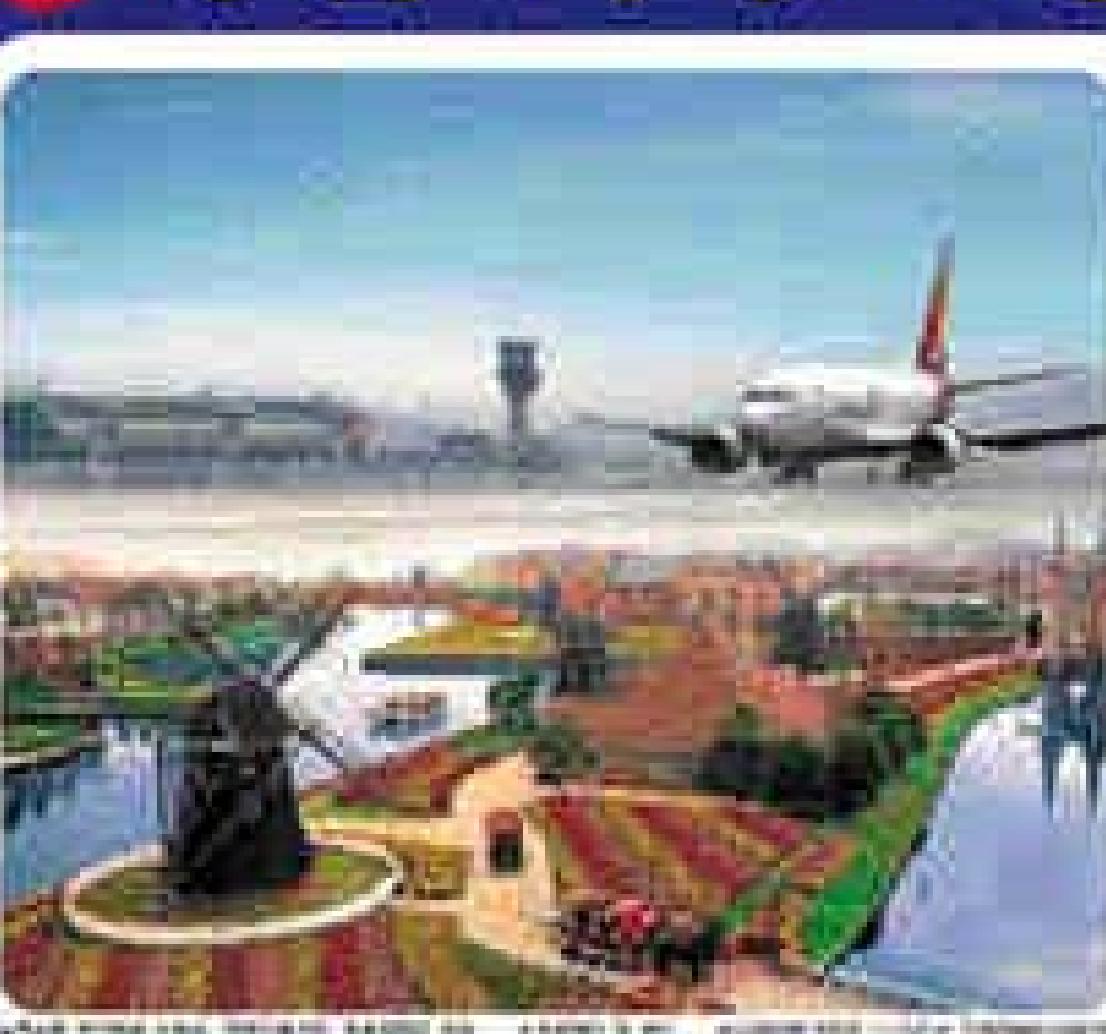
/연합뉴스

광주광역시-장성군 통합, 안정적인 노

인일자리 확보, 전원형 웨딩주거단지 조성 등 4개 분야 20가지 공약도 직접 설계했다. 조직과 돈, 소속 정당을 배제한 '3 무 클린선거'를 선언한 김 후보는 "시민과 돈이 물려드는 활기찬 장성, 통합의 장성을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08년 1월 6일~2008년 6월 운행

① 광주~인천 150km	₩ 49,500
② 광주~부산 240km	₩ 649,000
③ 광주~오산 40km	₩ 649,000
④ 광주~부산 350km	₩ 768,000
⑤ 광주~인천 240km	₩ 639,000
⑥ 광주~부산 350km	₩ 789,000
⑦ 오사카(류큐항) 400km	₩ 799,000



가족여행, 몬테리방, 하우스텐보스